

광주에 국가NPU컴퓨팅센터·AI연구원 설립 주목

국회 과방위, 내년 ‘AI 정부예산안’ 451억원 증액

국가AI데이터센터고도화 등 5개 신규 사업 반영

국가NPU(신경망처리장치) 전용컴퓨팅센터와 국가 인공지능(AI) 혁신연구원 설립 등 ‘광주 AI도시’ 구축을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당초 내년도 정부예산안보다 451억7000만원이 증액된 총 631억4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17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AI 관련 사업 예산안이 지난주 과방위 예산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AI기반 공간컴퓨팅 산업 육성’(130억원)과 ‘AI·모빌리티 SW생태계 조성’(100억원), ‘조선AX(AI 전환) 특화 AI모텔하우스 구축·실증’(120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광주 AI산업 육성과 관련한 사업은 모두 6개로, 이 중 신규사업이 5개에 달한다.

우선 계속사업인 ‘AX(AI 전환) 실증벨리조성사업’에 당초 정부안 169억7000만원에서 172억 7000만원을 늘어난 342억 4000만원이 배정됐다.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1차 년도 사업기간을 4.5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한 데 따른 증액이다.

‘국가AI데이터센터고도화사업’에는

209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국가 AI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가 AI센터 GPU자원 임차비와 AI데이터센터 GPU확장 설계용역비에 쓰일 예산이다.

‘광주AI실증도시 실현’을 위한 신규 사업에는 20억원이 배정됐다.

선형사업을 통해 확보한 AI 인프라와 지역특화산업역량을 기반으로 광주를 AX직접단지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로 쓰일 예정이다.

‘AI의료산업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는 신규로 30억원이 반영됐다.

실증인프라 중심의 AI의료와 헬스케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다.

과방위는 또 ‘국가NPU(신경망처리장치) 전용컴퓨팅센터’를 광주에 설립하는 데 20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 예산은 국산NPU 성능 검증부터 서비스 실증과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설계비에 쓰일 예정이다.

또 ‘국가 AI혁신연구원 설립’에는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국가 주도 AI 연구소 설립을 위한 기획연구비로 편성됐다.

과방위 위원으로 광주 예산 증액에 힘쓴 조인철 의원은 “광주는 AI기업 유치와 AI인재양성 등 생태계가 구축돼 있어 기업들이 ‘AI도시 광주’ 구축에 다달들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꿈꾸는 ‘AI 3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가 증액 의결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UAE·이집트·튀르키예 등 4개국 순방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 G20 참석차 아프리카 중동 순방

UAE·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방산·AI 등 ‘실용외교’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나섰다.

7박 10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정상외교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김혜경 여사, 참모들과 함께 출국했다.

첫 순방국은 UAE(아랍에미리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이하 현지시간)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이집트로 이동해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카이로대학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 중동 구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22~23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총 3개 세선에 참석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에 관해 논의한다.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소속국 정상들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 민간공원 특례 마륙공원 내달 ‘시민 품으로’

시, 21일 개장식…힐링·휴게공간 등 조성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하나인 마륙공원이 공사를 마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지난 3월 북구 신안동 신용공원이 조성된 것을 비롯해 오는 2028년까지 789만㎡ 부지에 10개 공원과 비공원시설(아파트)이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 마륙동 일대에 조성 중인 마륙공원(아파트 포함)이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오는 21일 마륙공원에서 개장식을 열고 공사 마무리를 알릴 계획이

다. 마륙동 일대 22만9603㎡ 부지에 17만7589㎡는 공원, 5만2014㎡에는 아파트를 지었다.

공원에는 자연놀이터, 생태학습원을 비롯해 무장에 산책로, 황토건강길 등의 힐링 공간과 휴게공간·체육시설 등이 조성됐다.

비공원 시설은 917세대 규모 아파트가 들어섰다.

공원은 내년부터 중앙2(1월, 서구 풍암동·남구 주월동), 운암산(2월, 북구 동림동), 일곡(8월, 북구 일곡동·양산동), 송암(11월, 남구 송하동·행암동),



서구 마륙공원 조감도.

중의(12월, 북구 운암동)가 속속 완공될 예정이다.

이어 2027년 6월 중앙1(서구 금호동·화정동)과 수량(광산구 소촌동·우산동)이 공사를 끝낸다.

아파트 공사도 2026년 중앙2

(7월), 일곡(10월), 중의(12월)가 완공된다. 이어 2027년 4월 봉산, 6월 중앙1·운암산, 10월 송암에 이어 2028년 5월 수량을 끝으로 아파트 공사도 마무리된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상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비공원 시설 용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789만4000㎡의 90.4%(713만3000㎡)는 공원으로 조성돼 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남은 9.6%(76만1000㎡)에는 아파트 1만 2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한중 관광교류 확대…무안공항 재개항 절실”

이철 도의원, 후베이성 대표단 방문 앞두고 협력방안 논의

전남도의회는 17일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 주재로 ‘한·중 관광 우호교류 및 무안공항 재개항 촉구 간담회’를 열고, 전남과 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날 밤 예정된 중국 후베이성 기업 대표단의 전남 방문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의 면담을 앞두고, 지역 관광산업 투자 유치와 교류 확대 방향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철 부의장을 비롯해 도 국제협력관, 관광체육국장, 사단법인 완도군관광포럼 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중 관광산업 공동개발 △지역특산물 수출 촉진 △무안국제공항

재개항을 통한 항공 접근성 확보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2025년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중 관계가 회복세를 보이고, 중국 단체 관광 재개와 수산물 수출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전남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교류 재개 흐름을 전남 관광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철 부의장은 “무비자 관광 확대와 한·중 관계 복원은 전남이 중국 관광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라



이철 부의장은 17일 전남도의회에서 ‘한·중 관광 우호교류 및 무안공항 재개항 촉구 간담회’를 열고, 전남과 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며 “무안국제공항 재개항은 중국 관광객 유치와 지역 수출산업 회복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논의된 내용을 도지사 면담

시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겠다”며 “도의회 유치와 지역 수출산업 회복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재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도, 현장 중심 인권보호 체계 강화 논의

23개 유관기관과 워크숍

전남도는 17일 도청에서 ‘인권구제 핫라인 협력 워크숍’을 열어 현장 중심의 인권보호 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인권도시 구현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워크숍은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기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행사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성·아동·노인·장애인·이주민 보호기관 등 전남 23개 인권

구제 핫라인 협력기관 관계자가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호 방안’과 ‘찾아가는 인권 상담소 운영 사례’ 등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인권지원 서비스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상주형 인권점검 체계 구축과 긴급구제 절차의 실효성 강화, 2026년 인권구제 핫라인 운영 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가능한 ‘인권구제 핫라인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

행안소위서 법안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

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면 ‘민주당, 지선’서 계속

1인 1표제 등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예컨대 한국노총과 전라지역에 대한 배려의 경우 표로서 하지 않고 다른 정책 배려를 통해 충분히 하겠다”며 “이미 수 차례 논의를 통해 보완책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규가 개정되면 민주당이 장당 이후 계속 유지해온 대의원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대의원제는 당원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한 상황에서 총성도가 높은 당원을 중심으로 당세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왔지만, 수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당이

늘어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헌·당규 개정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당세가 약하거나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1대 1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호남은 당의 기반은 가장 탄탄하지만 자발적 당원이 많지 않아 후보 경선에서 당원의 뜻을 반영하는 비중을 높일 경우 당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권리당원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지금보다 크게 늘린다면 당심이 왜곡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